ISSN 1738-0154 / eISSN 2713-6728

미·중 구조적 경쟁 시나리오: 양면균형화의 정책적 함의

반길주*

Ⅰ. 서론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Ⅲ. 미·중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 국제 및 지역 차원의 지정학
Ⅳ. 미·중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 한반도 지정학
Ⅴ. 결론

주제어: 미·중충돌 시나리오, 내적 균형, 외적 균형, 세력균형, 편승

|국문초록|

중국은 2049년을 중국몽 달성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초강대국 위상 등극을 통해 세력전이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단호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패권국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는 현시점부터 2049년까지 다양한 미·중충돌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미·중충돌 영역과 강도는 국제무대에서 '힘의 재편'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세력 재배분은 미국과 중국의 단독적 힘의 격차라는 '내적 균형'과 동맹국의 이합집산에 기초한 '외적 균형'의 조합에 의해 추동될 것이다. 본 논고는 이를 '양면 균형화(two-level balancing)'라 개념화하며 내적 균형 역학으로 4가지 상황을, 외적 균형 역학으로 3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양면 균형화 기제에 기초하여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7개 지정학적 충돌 시나리오와 4개의 한반도 차원의 지정학적 충돌 시나리오를 조망한다. 본 논고는 중견국 지정학 담론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학문으로서 지정학에 대한 연구영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동맹관리전략, 중견국 지정학 맞춤형 전략, 반회색지대 구상을 제언한다.

✣ 『국제관계연구』 제26권 제2호(2021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21.12.26.2.63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Ⅰ. 서론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미·중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더 격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냉전기와 달리 신냉전기에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1] 따라서 국제정치학에서 미·중 경쟁구도를 다루는 분석이 폭증할 정도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들어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선의의 경쟁을 넘어 상대이익의 쟁탈전으로 비화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중 간 패권전쟁이 과연 불가피한지를 다루는 분석도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2] 실제로 남중국해 등 대리전이 진행되는 전장에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며 직접적인 조우를 피하려 했던 과거와 달리 위기관리에 둔감해지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냉전기와 달리 신냉전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 신뢰구축조치도 빈약하여 사실상 확전을 차단할 제동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3] 이는 전략적 경쟁이 상대이익의 충돌로 비화되는 역학에 놓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미·중경쟁이 미·중충돌로 격화되면 전개될 양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논의는 국익확보를 위한 대응 시나리오 개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발적인 전쟁 혹은 대리전의 발발을 막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도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중경쟁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넘어 미·중경쟁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사안별로 유형화·구체화하여 시나리오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중심의 분석으로 발생가능한 상황과 전개양상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대안에 통찰력을 제공해 줄

---

1)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한 이론과 사례는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2017) 참고. 미·중경쟁으로 대변되는 현 국제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냉전과 신냉전 비교분석에 대한 글은 반길주,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a), pp. 7-59 참고.

2) 미·중 패권전쟁 불가피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글은 반길주, "미중 패권전쟁의 충분조건 분석: 결정론적 구조주의 한계 보완을 위한 행위적 촉발요인 추적,"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a), pp. 7-51 참고.

3) 반길주 (2021a), pp. 26-28.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도 미·중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무관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자 중국과는 지정학적 이웃이다. 따라서 미·중충돌은 한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중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편적, 일회성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외교안보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미·중 충돌양상 분석의 구체화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략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고에서는 시나리오를 유형화하여 전개양상을 진단함으로써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중충돌의 전개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문헌을 살펴본 후 전개 시나리오를 유형화하여 세부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중충돌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구조적 변수-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양면 균형 역학'을 분석의 틀로 제시한다. 양면 균형 역학의 변화에 따라 전개양상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미·중충돌 양상을 국제적/지역적 차원과 한반도 차원의 지정학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진단한다.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1. 미·중충돌 전개양상 문헌연구

미·중경쟁을 다루는 연구는 쏟아질 정도다. 미·중경쟁이 미치는 국제정치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파급효과는 근본적으로 미·중경쟁이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물리적 군사충돌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미·중충돌이 전개될 양상을 조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일부의 연구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강수정은 미국 싱크탱크들이 내놓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미·중관계에 대한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4] 박병광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전망하며 미·중 간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 심화 가능

4) 강수정,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분석: 2010년대 미국 싱크탱크들의 미래 전망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7권 제2호 (국제지역연구원, 2020), pp. 5-37.

성에 주목한다.[5] 한편 이러한 연구는 미·중충돌로 잉태될 수 있는 양상을 세부적으로 조망하기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정한범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개된 양상에 주안을 두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귀환'에 주목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 시나리오를 제시한다.[6]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막을 내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접어들어 되레 더 격화된 미·중충돌 구조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은 여전히 활발하지 못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 미·중경쟁을 분석하고 바이든 행정부 하 미·중경쟁 전개양상을 진단하는 연구들이 있지만 시나리오 분석 위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7]

특정 이슈나 영역을 대상으로 미·중경쟁의 향방을 살피는 연구도 있다. 강석율은 미·중경쟁의 핵심 대리전 지대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진행되는 경쟁양상 분석을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8] 린 외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가 갖게 될 것인지를 조망한다.[9] 스코벨 외는 중국의 대전략 진단을 통해 2050년 중국의 모습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승리(triumph), 우세(ascendancy), 부진(stagnation), 내파(implosion)-를 상정한다.[10] 미 정보국 예하 국가정보위원회는 2021년 3월 발표한 『2040년 글로벌 추세보고서(Global Trends 2040)』에서 미·중경쟁의 전개 시나리오를 3가지-민주주의 르네상스(미국 주도), 표류의

5) 박병광, "2021년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망: 혼돈의 지속과 심화되는 각국의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 『이슈브리프』 통권 23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p. 1-6.

6) 정한범, "동북아: 전통적 강자들의 귀환과 위기시나리오," 『국제정치연구』 제19집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6), pp. 185-213.

7)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관계 분석과 조망을 통해 한국이 선택해야 하는 방향을 살피는 문헌은 김현욱, "현 미중 경쟁 분석과 한국의 선택," 『정책연구시리즈』 2020-0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8) 강석율, "미중 지정학 경쟁의 최근 동향과 전망: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0. 5. 22 (한국국방연구원, 2020), pp. 1-10.

9) Bonny Lin, Michael S. Chase, Jonah Blank, Cortez A. Cooper III, Derek Grossman, Scott W. Harold, Jennifer D. P. Moroney, Lyle J. Morris, Logan Ma, Paul Orner, et al., "U.S. Versus Chinese Powers of Persuasion: Does the United States or China Have More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Research Brief*, 12 November 2020 (2020).

10) Andrew Scobell, Edmund J. Burke, Cortez A. Cooper III, Sale Lilly, Chad J. R. Ohlandt, Eric Warner, J.D. Williams, *China's Grand Strategy: Trends, Trajectories, and Long-Term Competition* (Santa Monica, CA: RAND, 2020), pp. 102-111.

세계(세계적 압도 부재 하 중국의 주도), 경쟁적 공존(양국 번영 하 양극화 세계에서 경쟁)-를 상정한다.[11)]

미·중경쟁의 시나리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특정 행정부의 전개양상에 주목하거나 미·중경쟁의 승자가 누구일지에 관한 전망적 성격의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일부 연구는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미·중충돌의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여전히 미시적인 양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기존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는 '힘의 재배분'에 착안하여 이 재배분의 수준에 따라 시나리오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사안별로 조망해 보기로 한다.

2. 분석의 틀: 양면 균형 역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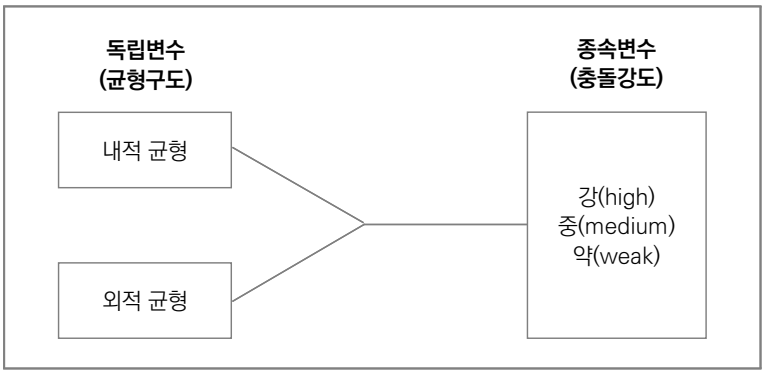
미·중충돌 양상은 힘의 재편 여부와 직결되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양자 간 자체적 힘의 우열과 동맹국·협력국 등 역내 국가의 이합집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자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에 주안을 둔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의 역학이고 후자는 동맹국과 힘을 합치는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의 역학이다. 따라서 내적·외적 구조적 동인 모두를 포괄하는 '양면 균형화(two-level balancing)' 역학을 분석해야 미·중충돌의 전개양상을 보다 적실성 있게 전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독립변수-내적 균형, 외적 균형-는 각자로서의 파급력보다는 상호결합되는 조합의 형태에 의해서 미·중 간 충돌의 강도가 변화될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 각자는 자체의 힘을 키우면서 동시에 외부행위자를 끌어들여 힘의 우위, 전략의 우위, 협상력의 우위를 갖고자 할 것이다. 이런 조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독립변수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11)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 (Geneva, Global Trends, 2021), p. 102, www.dni.gov/nic/globaltrends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동 보고서에 대한 분석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 NIC「2040년 글로벌 추세 보고서」발간," 『KIMA Newsletter』 제978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1), https://www.kima.re.kr/3.html?Table=ins_kima_newsletter&section=&mode=view&uid=1022?Table=ins_kima_newsletter&s=11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참고.

<그림 1> 양면 균형화 기제



* 출처: 저자 작성

우선 내적 균형에서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자체 국력이다. 미·중 간 주도권 경쟁에서 자국의 물리적 힘의 역량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두 강대국이 보유한 힘의 변화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바로 구조적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 동인이기도 하다. 내적 균형 변수는 각국의 힘이 변화되는 양상에 기초한다. 내적 변수는 힘의 우위, 균형, 혹은 열세를 좌지우지한다. 내적 균형 측면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4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신냉전 시대가 진행되면서 미·중 대결로 국력이 지나치게 소모되어 양국 모두 국력이 약화되는 경우다(상황 I). 이 경우 패권경쟁 무대의 3자에 머무르던 강대국 혹은 중견국이 반대급부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이 신장하는 가운데 국제적 사안에 대해 개입을 시작하면서 다극체제가 조성된다. 상황 I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초강대국으로서 위상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패권의 공백을 메우려는 국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부상한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미국의 국력이 강화되고 중국의 국력이 약화되는 경우다(상황 II). 이 경우 미국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보전하며 패권국의 지위를 지속하게 되지만 반대로 중국은 패권도전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패전국과 유사하게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셋째, 반대로 중국의 국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는 경우다(상황 III). 미국이 패권유지에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투입하면서 경제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은 '제국주의적 과잉팽창'으로 사라져버린 소련과 달리 '관리 가능한 팽창'

을 통해서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지속 신장시키는 시나리오다.[12] 상황 Ⅲ 지속 시 '패권전이'라는 국제질서 재편의 결과로 이어진다.

넷째,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경제와 군사에 재원을 균형감 있게 투입하면서 양국의 국력이 지속 강화되는 경우다(상황 Ⅳ). 이 경우 양국의 국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상황과 근접 균형을 이루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근접 균형'의 경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경우보다 체제적 불안정이 크겠지만, 미국의 기존 국제질서 유지와 중국의 현상변경 의도에 변화가 없는 이상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패권혼전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완벽한 균형인 상황조차도 이 균형을 와해하여 힘의 압도로 전이시키겠다는 동인이 작용하면서 이 균형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고 이는 체제 불안정의 요소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상황 Ⅳ는 패권혼전이 지속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내적 균형 역학

		미국 국력	
		약화	*강화*
중국 국력	*약화*	상황 Ⅰ 다극체제	상황 Ⅱ 패권유지
	강화	상황 Ⅲ 패권전이	상황 Ⅳ 패권혼전

* 출처: 저자 작성

양면 균형 역학의 또 다른 축은 외적 균형 기제다. 동맹국, 우방국, 방관국 등 외부행위자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지가 외적 균형 기제의 핵심적 작용요소다. 신냉전 역학의 핵심행위자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와 직결되는 요소이기에 미·중 이외의 행위자가 어떻게 이합집산하는지도 미·중충돌 시나리오 전망에 빼놓을 수 없는

12) 반길주(2021a)는 냉전과 신냉전을 비교함으로써 소련과 달리 중국의 외부지향적 행태가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팽창'이라고 주장한다. 반길주 (2021a), p. 19.

고려요소다. 인도-태평양지역 특히 서태평양에서 해양패권을 차지하는 국가가 패권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외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 행위자로 동아시아 주요국이 될 것이다. 즉 한국, 일본, 호주, 러시아, 인도가 어느 국가의 편에 서는지는 미·중충돌 전개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외적 균형 전개양상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동맹질서와 역내 국가의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다(상황 A). 쿼드(Quad) 국가는 미국과 다자공조를 더 강화하고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은 헤징(hedging) 정책을 지속하는 경우다. 상황 A에서는 세력균형과 군사력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운데 이 균형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패권경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국력이 될 것이다.

둘째, 동맹질서와 역내 국가의 행태가 중국에 유리하도록 변화되는 경우다(상황 B). 신냉전 시대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온 러시아·북한뿐 아니라 일본·호주·인도 등의 쿼드 3국도 대미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경사되는 경우다. 한국도 기존의 헤징전략에서 벗어나 중국과 안보협력까지 천명하는 시나리오도 이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역내에서 미국이 고립되는 상황 B에서는 미국이 간신히 유지해 온 패권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역내 국가의 중국경사 기울기가 심할 경우 패권주도권은 중국으로 전환된다.

<표 1> 외적 균형 역학

구분	변수	세부상황	구도판단
상황 A	행태 유지 현 동맹질서 유지 역내 국가행태 미변화	쿼드 3국: 미국과 공조 러시아·북한: 중국과 공조	미≒중 균형 기울기 결정: 미·중 자체국력
상황 B	행태 변화(중국 유리) 동맹질서 재편 역내 국가행태 전환	한국 포함 역내 모든 국가 : 중국경사	미〈중
상황 C	행태 변화(미국 유리) 동맹질서 재편 역내 국가행태 전환	북한 제외 역내 모든 국가 : 미국경사	미〉〉중

* 출처: 저자 작성

셋째, 동맹질서와 역내 국가의 행태가 미국에 유리하도록 변화되는 경우다(상황 C). 한국은 균형외교에서 벗어나 동맹안보로 정책을 전환하고 일본·인도·호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 안보공조를 제도화하면서 미국경사 구도가 조성된다. 러시아도 중국의 군사기술 갈취 등으로 불만이 쌓이고 심지어 냉전기 중·소 국경분쟁까지 재현되면서 중·러 공조의 틀이 깨지게 된다. 상황 C에서 미국의 행보는 기존 패권유지를 넘어 패권강화 양상으로 전개되고 중국은 고립되어 대국굴기나 현상변경 정책 추진에 큰 도전을 받게 된다.

'내적 균형' 기제와 '외적 균형' 기제가 조합된 '양면 균형' 역학의 수준에 따라 남중국해 내해화, 북극해 쟁탈전, 대만 문제 등 지정학적 도전과제의 충돌강도도 달라질 것이다. '1'은 내적 균형 상황 II와 상황 C가 조합된 경우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위협균형' 기제가 작동한 상황이다. 이 경우 미국 중심으로 세력의 압도가 조성되어 현상변경적 시도가 차단되면서 지정학적 도전과제의 부상 추동력은 미약하게 된다. '2'는 미·중 모두가 약화되는 상황 I 하에서 역내 다른 국가의 특정국 경사 동기가 이전보다 약화됨으로써 미국이 최소한의 영향력만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느슨한 다자주의가 가동되어 기존의 질서관리를 지속하기에 지정학적 도전과제는 미약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중강도 시나리오 전개인 '3'은 상황 III와 상황 C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신장되는 중국의 국력에 맞서 미국과 역내 다른 국가 간 '세력균형'의 기제가 작동되는 경우다. 이 경우 지정학적 이익 경쟁도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는 상황 III와 상황 B의 조합으로 중국이 국제질서를 사실상 장악하는 시나리오다. 미국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의 국력이 비약적 성장을 지속하여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서 중국에 대한 '편승'의 동기가 작용하게 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중국의 의도대로 지정학적 이익이 급속하게 배분되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처럼 양면 균형 기제는 지정학적 도전과제의 향방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제에 영향권 하에 있게 되는 지정학적 도전과제를 유형화하여 양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과정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국이고 중국과는 지리적 이웃이라는 점에서 미·중충돌에 기반한 양면 균형 기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미·중충돌 시나리오를 국제적/지역적 수준과 한반도 차원의 과제로 나누어 지정학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기로 한다. 단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시나리오도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표 2> 양면 균형 역학과 지정학적 충돌의 강도

강도수준		조합		비고
		내적 균형	외적 균형	
1	최저강도 (미국 압도)	상황 Ⅱ	상황 C	*위협균형* 기제 작동 - 미국 중심 세력의 압도 - 지정학적 도전 미부상
2	저강도 (동시 약화 혹은 동시 강화)	상황 Ⅰ	상황 A·B·C	*느슨한 다자주의*(질서 변화) * 미국: 최소영향력은 유지
		상황 Ⅳ	상황 A	전략적 균형 유지, 위기관리 작동
3	중강도 (대중국 다자 견제)	상황 Ⅲ	상황 C	*세력균형* 기제 작동 * 지정학적 이익 경쟁 심화
4	고강도 (중국 압도)	상황 Ⅲ	상황 B	*편승 기제* 작동 * 지정학적 이익의 급속한 배분

* 출처: 저자 작성

Ⅲ. 미·중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 국제 및 지역 차원의 지정학

미·중충돌은 정치, 경제, 사회, 보건 등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미·중충돌이 격화되어 군사적 마찰로 빚어지는 상황이 가장 충격의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본 논고에서는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이라는 변수의 조합이 왜 아래에서 제시하게 될 11개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1개 시나리오를 선정한 배경은 강하든 약하든 이 지대가 미·중경쟁의 대리전 지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물론 현재는 대리전 지대로 전혀 기능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부상할 수 있는 지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대리전 지대로 기능한다면 양면 균형 역학에 의해 더 쉽

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가능성 측면에서 더 유의미하다는 것이 시나리오 선정의 배경이다.

시나리오 진단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해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의 공세를 저지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미국은 방자(防者)이고 중국은 공자(攻者)인 셈이다. 따라서 미·중충돌의 연쇄고리에서 시작점을 제공하는 중국의 목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자인 중국에게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중국은 2049년을 목표로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추진 중이다.[13] 이를 위해 중국몽과 일대일로를 공세적으로 추진하여 중국을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력전이를 달성하겠다는 대전략을 세워놓은 상태다.[14] 따라서 2049년은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패권지위 행사의 원년이라는 국제정치적 의미가 있다.[15] 군사적 측면에서는 2035년까지 인민해방군을 현대화시킨 후 2049년까지 세계군대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다. 해상통제권을 확보하여 해양패권을 거머쥔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자강(自強)' 즉 내적 균형화 기제를 작동시키면서 동시에 '외연(外緣)' 즉 외적 균형화 기제를 자국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양면 균형 시도에 미국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시나리오 유형과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표 2〉에서 제시한 유형 중 양면 균형 기제가 4(고강도 미·중충돌)인 경우가 1(최저강도)인 상황보다 시나리오 부상 및 심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의미다. 양면 균형의 역학은 2049년에 근접할수록 본격화·정교화될 것이다. 미·중충돌 시나리오는 국제적/지역적 차원과 한반도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지정학에 기반한 미·중충돌 시나리오를 살펴보기로 한다.

---

13) Andrew Scobell, Edmund J. Burke, Cortez A. Cooper III, Sale Lilly, Chad J. R. Ohlandt, Eric Warner, J.D. Williams (2020), p. 101.

14) 중국의 전략으로서 일대일로 논의는 김재관,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동북아연구』 제33권 제2호 (동북아연구소, 2018), pp. 285-287 참고.

15) 홍건식(2018)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AIIB를 패권국 정체성 구성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8), pp. 99-146.

<표 3> 국제적/지역적 지정학 차원의 미·중충돌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전개양상
[1]	중국몽 질서 강압	중국 : 규칙 설정·집행 주도
[2]	항행의 자유 잠식	항행의 '자유'와 '거부'의 충돌 심화
[3]	중국의 우주/사이버 영역 장악	우주 패권경쟁으로 전이
[4]	북극해 폐쇄지대화	중·러 공조로 북극해 비공공재화 시도
[5]	중국의 대만 무력점령	4 상황시 시도 가능성 농후
[6]	동중국해 내해화	3, 4 상황시 시도 가능성 높음
[7]	서태평양 해상교통로 봉쇄	4 상황시 시도 가능성 높음

* 출처: 저자 작성

1. 중국몽 질서 강압

중국은 2049년을 패권전이의 원년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중국몽을 본격화하고 있다.[16] 양면 균형 역학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면 중국몽 질서 강압의 수위가 상승하고 '4' 상황(고강도 미·중충돌)까지 되면 '중국몽 체제'가 '팍스아메리카나 체제'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17] 이 경우 미국을 대신해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rules-based order)'를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18] 물론 규칙을 정하고 해석하는 주도권은 중국이 행사한다. 중국몽 질서에 불응 시 중국은 해당국에 대한 배척·배제·보복 등의 조치가 반드시 가동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2021년 3월 영국·캐나다·미국 등 서방진영 국가들이 중국의 신장 인권탄압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중국 제재를 하자 중국도

16) 중국몽과 중국의 강대국 비전에 대한 논의는 유희복, "주요 모순의 재규정과 중국몽: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전략적 변용," 『중국지식네크워크』 제14권 제14호 (중국지식네트워크, 2019), pp. 5-48; 이정남, "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팍스 시니카(Pax-Sinica) 구상과 그 한계," 『아세아연구』 제61권 제4호 (아세아문제연구원, 2018), pp. 166-193 참고.

17) 반길주(2020a)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와 '중국몽 전략'의 충돌로 규정한다. 반길주(2020a), pp. 16-20.

18)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 질서 관련 국가별 인식의 비교는 정구연·이재현·백우열·이기태,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8), pp. 5-40 참고. 패권약화에 따른 중견국의 규칙기반 질서 관련 행태변화에 조망은 정성철,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쇠퇴? 글로벌 패권의 약화와 민주주의 중견국의 규칙기반질서 추구," 『정치·정보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20), pp. 141-164 참고.

이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성 제재를 가한 바 있다.[19] 양면 역학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조성되면 중국의 이런 보복은 맞대응 성격을 넘어 일방적 조치로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몽 질서 강압의 대상 영역도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서태평양으로 확장된 후 전 세계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넓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지위가 전환되는 시나리오다. 패권전이로 중국이 현상유지국으로 지위가 상승하고 반면 미국은 현상변경국으로 전환되는 변화된 위상으로 발생한 파급효과인 셈이다. 중국몽 질서는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와 자발성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자발적 의사와 판단에 따라 편입한 경우지만, 후자의 경우는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토록 강압한다는 속성이 있다.

중국은 완벽한 세력전이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중국몽 질서 강압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은 세력전이 이전에는 기존의 특정 규칙의 불인정 전략으로 불순응 의사를 현시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구단선을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제기하며 순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은 양면 균형 역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 내해화를 시도하는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유권해석의 행사권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도 불순응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6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유럽의회는 중국을 ICJ에 제소하는 결의안을 추진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한 바 있다.[20]

중국은 이러한 법률전과 병행하여 회색지대전략을 적용하며 점진적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잠식하는 방법으로 중국몽을 진척시킬 것이다. 2021년 3월 중국은 200여 척의 해상민병선단을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

19) 『한겨레』, "중국, 신장 관련 영국에 보복 제재…게임서 버버리도 퇴출," 2021년 3월 26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8361.html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20) 『서울신문』, "美·EU·英 '홍콩 간섭 멈춰야'…中 '내정 간섭 말라'," 2020년 6월 12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2500209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Exclusive Economic Zone) 내에 있는 휘선암초(Whitsun Reef)에 해상민병을 대거 주둔시키며 회색지대 강압을 시행한 바 있다.[21] 이러한 회색지대 강압은 미국의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 시 남중국해 내해화 최종공세로 이어지고 중국 중심의 항행의 거부 질서 구축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로 비화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몽 질서 공고화를 위해 G7 무력화를 시도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나 레짐의 창설을 구상하는 등 국제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연착륙하면 중국식 민주주의·중국식 자본주의가 가장 우수한 제도라 부각시키며 중국식 시스템의 전 세계적 확산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

2. 항행의 자유 잠식

미·중충돌은 핵심해역의 관할권 선점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항행의 자유'와 '항행의 거부'가 충돌하는 영역과 강도가 변화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를 항행을 거부시켜야 하는 영역으로 여기고, 반대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유지시킴으로써 해양패권을 지속하겠다는 대치적 입장에 있다. 미국은 2015년 구축함 라센함(USS *Lassen*)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개시한 이후로 현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 작전원칙을 고수하고 있다.[22] 그런데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이 작전을 시행하는 일이 빚어졌다. 미 해군은 2020년 12월 15일 일본이 영해라 주장하는 대한해협 인근 해상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시행했다.[23] 2021년 3월 31일에는 국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집행했다.[24]

---

21) Mark J. Valencia, "The Whitsun Reef Incident and the Law of the Sea," *Lawfare*, 16 April 2021, https://www.lawfareblog.com/whitsun-reef-incident-and-law-sea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The Economist*, "The South China Sea: Reef madness," 10 April, 2021, p. 19.

22) 2015년 라센함의 항행의 작전에 대한 교훈분석은 Benjamin K. Wagner, "Lessons from Lassen: Plotting a proper course for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 9, No. 1 (2016), pp. 137-166 참고.

23) 『연합뉴스』, "'美, 日 겨냥 항행의 자유 작전…직선기선·영해확대 문제삼아'," 2021년 4월 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5145100073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24) 『동아일보』, "미군, 우리 영해서도 '항행의 자유 작전' 펼쳤다," 2021년 4월 7일, https://www.donga. com/news/article/all/20210407/106282706/1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미 해군의 동맹국 대상 항행의 자유작전은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동맹국으로도 이 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이다. 규칙기반 질서는 하나의 원칙이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명분이 지속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속내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통의 원칙임을 내세우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대중국 견제가 동맹협력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둘째, 대중국 작전과 대동맹국 작전의 차이점이다. 미군은 중국을 대상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집행할 시 연안전투함, 구축함 등 전투함을 투입하지만 일본 대상 작전 시 엘런 셰퍼드함(USNS *Alan Shepard*), 한국대상 작전 시 찰스 드루함(USNS *Charles Drew*)을 동원했는데 이는 모두 군수지원함이었다. 이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적용하는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향후 항행의 자유작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다. 일본이 미국경사로 진행되고 한국이 중국경사로 전개되면 대일본, 대한국 항행의 자유작전 투입전력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면 역학은 '항행의 자유'가 승리하는지 아니면 '항행의 거부'가 승리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동인이 될 것이다. '1(최저강도)' 상황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겠지만 '4(고강도 충돌)' 상황에서는 미국이 작전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중국은 자국에 편승한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해역 통과권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보복성 차단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항행의 자유가 잠식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조치는 남중국해 섬들뿐 아니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의 동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원칙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중국의 우주·사이버 영역 장악

미 정보국은 2021년 4월 『2021년 세계안보위협평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우주 및 사이버 능력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우주역량을 따라잡기 위해 2022~2024년 차이에 저궤도 위성을 전력화하고 반위성(ASAT: Anti-Satellite) 무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

다.[25] 또한 중국은 미 본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능력을 신장시키고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런 능력을 독재국가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적시했다.[26]

중국은 내적 균형 측면에서 자체의 우주·사이버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지만, 북한 등 독재국가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거나 협력함으로써 외적 균형 기제가 자국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도록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군은 중국의 우주능력 신장을 상쇄하기 위해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하는 등 공세적 행보에 나서며 국제적 지정학을 넘어 우주 지정학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27] 우주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조망권을 제공하는 공공재의 성격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미·중충돌이 격화되면 공공재 성격이 퇴색되고 군사주권의 영역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먼저 차지하는 국가가 자국의 영향권으로 만드는 공식이 작용됨을 의미한다. 북극지역이나 남중국해처럼 우주영역에서도 선점의 역학이 작동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이다. '3~4(중강도-고강도 충돌)'의 상황에서 이런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우주영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이버 공간도 군사지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미·중충돌이 심화되더라도 당장 물리적 군사력을 동원해 상대국을 무력화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기에 사이버전으로 상대방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공격이 심화될 것이다. 사이버 기술이 진보하면서 공격주체를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면 하에서 갈등의 요소가 축적되는 가운데 민간영역도 사이버전의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회색지대 역학은 세력전이가 되는 시점에 물리적 군사력의 투입도 병행되면서 서서히 흑백지대 역학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다. 미·중충돌 과정에서 입장과 정책선택에 따라 한국도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28] 특히 가상화폐 공격의 피해로

---

25)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pril 2021, pp. 7-8, https://www.dni.gov/index.php/newsroom/reports-publications/reports-publications-2021/item/2204-2021-annual-threat-assessment-of-the-u-s-intelligence-community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26)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021).

27) 신성호(2020)는 미·중 간 우주역량 고도화 경쟁을 우주 패권경쟁으로 규정한다. 신성호,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지구를 넘어 우주 패권 경쟁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2호 (국제학연구소, 2020), pp. 65-90.

28) 중국의 사이버전 역량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차원의 함의를 조망하는 논문은 박남태·백승조, "중국군 전략지원부대의 사이버전 능력이 한국에 주는 안보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국방연구원, 2021), pp. 139-163 참고.

사이버 금융시장 신뢰도 저하에 직면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 시 한국은 사이버 지정학 등 복합지정학에 관심을 증대하여 미·중충돌의 대리전 지대화를 차단하는 장치의 가동이 절실하게 될 것이다.

4. 북극해 폐쇄지대화

신냉전 시대에 직면하면서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에 이어 북극해도 새로운 대리전 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경쟁의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다면 북극해는 러시아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선점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북극해는 항로개척, 자원개발 등 비군사적 이슈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신냉전이 심화되면서 북극해가 안보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2015년 북해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이를 군관구로 격상시킨 바 있다.[29] 나아가 러시아는 미사일을 탑재한 쇄빙선 함대 완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냉전기 사용된 북극지역의 전략적 기지를 복원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전략핵잠수함 3척이 북극 빙하를 뚫고 나오는 훈련을 통해 러시아의 북극지역 선점을 과시했다.[30] 중국도 자국을 준북극권 국가로 규정지으며 북극해를 국익 쟁취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나서고 있다.[31] 2018년에는 북극정책을 다루는 백서를 발간하는 등 국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지역 공세에 맞서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북극전략』을 3년 주기로 발간하며 이 지역에 미국의 이익이 존재함을 천명하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미 해군이 『대양북극』이라는 제목의 북극전략서를 내놓는 등 군사적으로도 주목하는 모양새다.[32]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쇄빙

29) 사령부 창설에 즈음한 러시아의 북극지역 관심에 대한 글은 Zachary Keck, "Russia to Establish Arctic Military Command," *The Diplomat*, February 21, 2014, https://thediplomat.com/2014/02/russia-to-establish-arctic-military-command/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참고.

30) *Reuters*, "Three Russian submarines surface and break Artic ice during drills," March 27, 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russia-military-arctic-idUSKBN2BI2RZ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31) 『신화망』,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 발표," 2018년 1월 27일, http://kr.xinhuanet.com/2018-01/27/c_136928858.htm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32) U.S. Navy, "*A Blue Arctic: A Strategic Blueprint for the Arctic*," January 5, 2021, https://media.defense.gov/2021/Jan/05/2002560338/-1/-1/0/ARCTIC%20BLUEPRINT

선 함대 구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냉전 시대에 강대국이 북극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양면 역학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 북극지역과 북극항로를 일대일로에 정교하게 포함시켜 자국의 관할지대화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 수순은 중국이 러시아와 공조해 북극해를 폐쇄지대로 만드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중·러가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며 핵잠수함 빙하 통과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군사선점을 현시할 수도 있다. 북극해 폐쇄지대화는 중국에 편승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차별대우하는 조치로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에만 북극해 통과허가권을 제공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도 러시아와 협력해 통행료를 부과하려 들 수 있다. 현재 러시아는 북극항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데 중국으로 세력전이가 이루어지면 연대를 통해 자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33] 사실 통행료 부과는 중국몽 질서 속에서 중국이 북극해 해양통제권이나 관할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나아가 중국은 서방진영 함정이나 항공기를 대상으로 북극지역·북극해 훈련금지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북극해가 폐쇄지대화되면 한국은 해수온도 상승으로 창출된 북극항로 이용의 기회가 사장됨으로써 경제이익이 잠식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 지정학적 이익 확장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강대국 편승 요구가 부상할 개연성이 있다.

5.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

양면 균형에서 '④(고강도 충돌)' 조건은 국제적 힘의 재배분 결과 중국의 우위를 창출한 상황이고 이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대만 무력 점령 여건이 조성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이 대만점령 시도 시 미국이 이를 힘으로 막아내는 기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대만의 전략적 선택지가 변화될 여지도 분

%202021%20FINAL.PDF/ARCTIC%20BLUEPRINT%202021%20FINAL.PDF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33) 북극항로 통행료 관련 글은 Dmitry Tulupove, "Russian Services Have a Price," *RIAC*, March 21, 2013, https://russiancouncil.ru/en/analytics-and-comments/analytics/russian-services-have-a-price/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명 존재한다. 즉 대만이 생존을 위해서 중국에 많은 것을 양보하더라도 편승하려는 기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편승 기제의 창출은 분명 구조적 원인이지만, 이는 전략적 선택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중국의 무력침공 판단을 구조적 요소로만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현재 대만이 중국이 무력점령 시 필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경사라는 전략적 옵션은 아직 가능한 선택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선택지는 힘의 재배분이라는 구조적 역학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무력점령 옵션은 '일국양제' 원칙을 폐기처분한 가운데 '일국일제'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시 중국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자신의 공세가 미국에 통하는지 시험한 바 있다. 내적 균형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압도적 힘의 열세인 상태에서 외적 균형 측면에서도 중국의 대만공세에 부정적인 국제사회와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은 군사력을 신장시키며 대만 무력점령 시나리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왔다.[34] 2021년 중국의 대만공세는 1996년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항공모함 보유국이 된 중국은 2021년 4월 미국의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맞서 랴오닝 항공모함까지 동원하며 동급수준의 해군작전능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나아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도 군용기를 대거 진입시키는 등 해양굴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35]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중국의 대만침공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1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대만침공에 미국이 개입 시 승전가능성은 있지만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미 공군 워게임 결과를 보도하며 중국군의 사기를 고양시키기도 했다.[36]

---

34)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는 김현승, "대만해협 위기 시 중국의 해군력 운용 양상 평가 및 안보적 함의 – 대만해협 봉쇄 및 미군 개입 거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총』, 제7집 제1권 (미래군사학회, 2018), pp. 197-224 참고.

35) 『아시아경제』, "[글로벌포커스] 美·中 함대 추격전, 전운 감도는 대만해협…G2 일촉즉발 대치," 2021년 4월 13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1311232817896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36) *South China Morning Post*, "How next-generation technology could allow US to fight off mainland Chinese invasion of Taiwan," April 24, 2021,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130848/how-next-generation-technology-could-allow-us-fight-mainland (검색일: 2021년 4월 27일).

미 군사당국은 2027년경 중국이 대만 무력점령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3월 존 아퀼리노 대장은 인도-태평양사령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2027년 즈음 중국의 대만 군사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37] 2028년경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평가는 미·중 세력 재배분이라는 기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국의 대만침공 시기를 2025년으로 재조정한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38] 양면 균형 측면에서 2025~2027년경 '4'의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미·중 세력격차가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이기에 대만에 대한 무력공세가 강화될 개연성은 높다.

중국의 대만공세는 양면 균형 역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1'의 상황에서는 미국이 해양패권을 유지하기에 중국이 대만공세를 시도하더라도 1996년 대만해협 위기와 비슷한 굴욕적 상황에 재직면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물리적 군사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미사일 등 '거부전력'을 십분 활용하여 일국양제 원칙을 강압하는 수준의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39] '3'의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 군사대결을 감수하고라도 대만 무력점령의 여건 조성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대리전 차원의 저강도 국지도발을 지속함으로써 대만점령 기정사실화를 추구할 것이다. '4' 상황에 도달 시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무력점령하더라도 세력이 약화된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감수하고라도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동기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가 중국에게 대만 무력점령의 최적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문제가 미·중충돌의 군사적 대리전으로 치달을 시 미국은 한국에게 대중국 군사억제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한·미동맹 역학의 확장을 요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세력균형', '위협균형',

---

37) 윤석준, "〈윤석준의 차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 『조선일보』, 2021년 4월 5일, https://bemil.chosun.com/ nbrd/bbs/view.html?b_bbs_id=10158&num=5960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38) 『연합뉴스』, "중국 대만 공중압박 소강…'중국 2025년 대만 전면침공 역량'," 2021년 10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6025752089 (검색일: 2021년 12월 11일).

39) 중국의 해양군사력을 '투사전력'과 '거부전력'으로 구분하여 그 의도를 분석한 글은 반길주, "중국의 투트랙 해양군사력 구비전략과 한국의 도전과제," 『아세아연구』 제64권 제1호 (아세아문제연구원, 2021b), pp. 349-384 참고.

‘편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정교한 대응을 위해 단계적 관여가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로 중국의 대만위협 공세에 반대의사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을 상정할 수 있다.[40] 2단계로 군용수송기, 군수지원함 등 지원전력 파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로 전투함 등을 파병해 미국 중심의 연합 현시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임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위기관리나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building Measure)와 같은 정책적 요구도 함께 부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6. 동중국해 내해화

양면 역학 ‘3~4(중강도-고강도 충돌)’ 조건 시 중국은 동중국해 내해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중국해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지정학적 영역이다. 중국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와해시키기 위해 해상민병, 해경함정 등을 센카쿠열도에 지속 전개시키고 있다. 특히 2021년 2월 1일부로 해경의 무기사용권을 담은 해경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41] 중국이 남중국해 내해화를 달성하면 동중국해 내해화로 본격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는 여건 조성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13년에 중국이 동중국해에 ADIZ를 선포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은 CADIZ 선포과정에서 한국 및 일본에 사전통지나 협의 없이 이어도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해양이익의 권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42]

현재는 양면 역학이 ‘1’ 상황에 놓여있기에 중국은 회색지대 강압이라는

40) 2021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본 논고에서 언급하는 정치적 선언의 여건 조성을 구축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공동성명 전문은 『연합뉴스』, “[전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년 5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input=1195m (검색일: 2021년 6월 15일).

41) 『부산일보』, “중국, 자국 수역 내 해경 무기 사용 허용…일본 긴장감 증폭,” 2021년 1월 31일,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3118135469679 (검색일: 2021년 4월 22일).

42) 반길주, “해양경계 모호성의 딜레마: 동북아 방공식별구역의 군사적 충돌과 해양신뢰구축조치,” 『아세아연구』 제63권 제2호 (아세아문제연구원, 2020b), pp. 187-188.

점진주의로 일본과 미국의 해양이익을 서서히 잠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양면 역학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환되면 회색지대 속성을 과감히 탈피하고 군사공세를 본격화할 수 있다. 특히 '4' 조건이 충족되면 센카쿠 열도 점령에도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안보공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2021년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문서에서 센카쿠 열도 방어가 미·일안보조약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43] 이처럼 미국이 동맹의 '연루'까지 감내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세력이 약화되면 이러한 공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양면 균형 역학을 주지하면서 이러한 틈새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센카쿠열도 무력점령은 방법적 차원에서는 방어취약 시간대인 야간을 이용하여 해상민병을 기습상륙시키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도 미국 및 일본의 해군과 직접 조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센카쿠열도와 가까운 해역에서 먼 해역 순으로 제1방어선에 해상민병을, 제2방어선에 해경을, 제3방어선에 구축함과 항모를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미국도 쿼드 국가를 중심으로 연합작전부대를 구성해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이를 확대하기 위해 역내 다른 국가의 참여도 요청하는 가운데 그 요청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의 선택지는 정치적 선언 혹은 지원함 후방지원에서 전투함 전개까지 다양하겠지만 참여폭과 수준에 따라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연루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7. 서태평양 해상교통로 봉쇄

양면 균형 기제에서 세력의 재배분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지렛대가 넘어가면 중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거부를 넘어 서태평양 해상교통로 전체를 봉쇄하려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남중국해 내해화-동중국해 내해화-서해 내해화' 단계를 밟으며 해양통제 권력을 확장하는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43) The White House, "U.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U.S.-Japan Global Partnership for a New Era'," April 16,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16/u-s-japan-joint-leaders-statement-u-s-japan-global-partnership-for-a-new-era/ (검색일: 2021년 4월 22일).

있다. 2021년 3월 에버기븐호의 좌초로 세계무역의 12%가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가 차단되면서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44] 수에즈 운하 차단만으로도 해상무역에 큰 차질을 빚은 경험을 고려하면 서태평양 봉쇄의 상황은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역내의 국제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제안보의 불안정 요소가 될 것이다.

전개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해보면 우선 중국이 서태평양 일부를 대상으로 항행제한수역을 설정·선포할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물리적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은 회색지대 강압 성격이 크다. 다음 단계로 중국은 해상교통로 보호를 명분으로 사전허가제를 시행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후속조치로 해경과 해군의 함정이 민간선박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투입된다.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한 미국은 쿼드 해군과 다국적 해상부대를 전개하여 맞대응에 나선다.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도 이 부대에 합류하면서 충돌의 규모가 확장된다. 중국은 러시아 및 이란 해군과 자국 중심의 다자적 해상부대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이 경우 두 개의 다국적군 해상부대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치 속에 해상을 통한 무역에 대부분 의존하는 한국은 심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고 미국은 한국에게 경제를 위해서라도 미측의 다자적 해상부대에 참가하라는 압박을 줄 수 있다. 한국은 '편승'이냐 '균형'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Ⅳ. 미·중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 한반도 지정학

양면 균형 역학은 국제적/지역적 지정학을 넘어 한반도 지정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은 신냉전 시대에 규정되는 전략적 경쟁자는 아니지만 한반도가 미·중의 대리전 지대로 기능한다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미·중충돌 시나리오에서 배제될 수 없다.

---

44) *Skynews*, "Suez Canal blocked: What the mishap in one of the busiest shipping lanes means for the world," March 31, 2021, https://news.sky.com/story/why-the-cost-of-suez-canal-mishap-is-being-calculated-around-the-world-12255715 (검색일: 2021년 4월 22일).

당장은 남중국해 등 한반도 외부가 미·중경쟁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양면 균형 역학의 변화에 따라 전략적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한반도로 고강도 대리전 지대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한반도 지정학 차원의 미·중충돌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전개양상
[1]	서해 내해화	제2의 남중국해화
[2]	이어도 관할권 지대화	제1도련선 한반도에 본격 적용
[3]	KADIZ 유명무실화	중국 자국의 작전지대화
[4]	동해 중국어선 통상 조업수역화	중국의 동해로 영향력 본격 확대

* 출처: 저자 작성

1. 서해 내해화

중국은 본토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해역부터 내해화를 시작한 후 그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양공세의 후반기에 서해 내해화를 시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중국은 서해를 제1도련선에 포함시켰고, 2010년 이후 내해화 여건조성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0년 미 항공모함의 서해진입을 극구 반대한 바 있고 124도선을 넘어선 해역까지 함정을 보내고 있으며 항모강습단 훈련에도 서해를 포함해오고 있다.[45)]

서해 내해화 시도는 남중국해 내해화의 공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크게 3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1단계로 저강도 공세에 기반하여 무형적 자산으로 회색지대 강압을 시행한다. 중국은 서해가 1도련선에 포함된 내해임을 천명하고 124도 이동 해역에 작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단계는 중강도 공세로 회색지대 강압의 기조는 동일하지만, 유형적 자산까지 동원된다는 점에서 1단계보다는 상향된 조치다. 조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어선을 투입해 비군사함대를 구성하여 백령도, 연평도, 어청도 근해로 파견해 상시 체류하는 식의 회색지대 강압이 가능하다. 물론 투입된 어선은 해상민병이기에 중국 군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45) 반길주 (2021b), pp. 368-371.

될 것이다.

3단계는 고강도 공세로 군사자산까지 동원되어 탈회색지대적 공세를 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서해에 경비구역을 만들어 군함을 상시 현시시키고 특정 시점에서는 항모강습단을 보내 서해 내해화를 공식화하며 한국전력의 해상 전개를 차단하려 할 것이다. 물론 항공모함과 같은 투사전력과 병행하여 미사일 위협도 가하는 A2/AD 작전도 운용할 것이다. 특정시점은 미국이 '연루'가 아닌 '방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신호가 제공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힘의 구조적 배분이 미국의 방기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의 물리적 힘이 약화되고 한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미국의 방기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한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 미결정 상황이 동맹국 미국과 결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보로 해석될 여지는 존재한다. 더불어 한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 방기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더 난해하게 만들 수 있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로 인해 미국의 방기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구조의 역학 변화로 미국의 한국 방기에 대한 신호가 부상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신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기 신호가 부상하지 않도록 일본의 사례를 면밀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센카쿠열도는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의 서해 관할권은 미포함시키는 동맹 차별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외교안보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2. 이어도 관할권 지대화

이어도 관할권 지대화는 서해 내해화와 병행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서태평양 전체의 해양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해와 이어도 인근 해역 모두를 1도련선 내에 위치한 폐쇄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6년 한국의 이어도 관할권 불인정 이후 법률전 뿐 아니라 함정까지 동원하며 이어도에 대한 강압을 시도하여 왔다.[46] 중국의 회색지대

강압이 이미 15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한국은 중국의 이어도 강압에 대한 본질을 정교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4(중강도-고강도 충돌)'의 상황전개 시 중국은 빠른 템포로 이어도 관할권 지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물론 작전적 절차는 서해 내해화의 공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우선 1단계 저강도 공세로 중국은 이어도 자치구를 지정하여 행정구역화하는 법률전을 통해 무형적 조치 기반 하에 회색지대 강압을 시도할 것이다. 중강도 공세인 2단계에서는 유형적 자산을 동원한 회색지대 강압의 기조하에 해상민병을 이어도 해역에 상주시키며 필요 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실효적 지배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3단계에서는 군사력을 직접 투입하는 고강도 공세를 통해 이어도 관할지대를 기정사실화 할 것이다. 군함을 상시 전개하고 특정 시점에는 항모강습단까지 동원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특정 시점은 서해 내해화처럼 미국의 방기 신호 제공 여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3. KADIZ 유명무실화

양면 균형 역학이 호재로 작용 시 중국은 자국의 ADIZ는 확대하고 타국의 ADIZ는 무실화하는 회색지대 공세에 나서게 될 것이다. 중국은 2013년 동중국해에서 ADIZ를 선포한 후 영토분쟁과 미·중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남중국해에도 ADIZ를 설정해야 한다는 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47] 이런 담론형성 자체가 의도적인 여건조성의 일환이기에 남중국해 ADIZ 설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은 자국 ADIZ 확장, 타국 ADIZ 무력화를 점진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미 KADIZ 유명무실화 1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단계에서는 회색지대전략을 적용하여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며 한국의 퇴거요구에 직통망으로 '통상활동'이라는 수준의 응답만 한다.

---

46) 반길주 (2021b), pp. 372-373.

47) 안슬기, "중국의 남중구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가능성에 대한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31집 제1호 (21세기정치학회, 2021), pp. 143-148.

2020년 12월 22일 중국은 러시아 군용기 포함 19대의 군용기를 KADIZ에 대거 진입시키면서도 통상활동 중이라며 직통망으로 한국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48] 양면 역학 '2~3(저강도-중강도 충돌)' 국면에서는 중국은 중강도 공세인 2단계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중국은 KADIZ에서도 핵심지대인 이어도 상공과 독도 상공까지 군용기를 투입시키면서 직통망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KADIZ 선점 기정사실화를 진척시킬 것이다. 한편 한국이 전투기로 대응 시 KADIZ 외부로 잠시 이탈하는 조치를 통해 회색지대 속성을 지속시킬 것이다. 중국은 '4(고강도 충돌)' 역학 조건의 기회를 맞게 되면 정찰기와 전투기를 동시에 투입시켜 한국의 전투기와도 군사적 대결을 펼치는 3단계 고강도 공세를 펼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연합공조로 KADIZ를 자신의 작전구역으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KADIZ 무력화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4. 동해 중국어선 통상 조업수역화

중국은 양면 균형 역학의 모든 수준(1~4)에서 동해를 자국 어선의 통상 조업수역으로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중국의 공세 강도는 1보다는 4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미 여건조성에 착수했다. 중국 군용기의 동해 KADIZ 진입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어선은 동해와 북한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아왔다.[49] 어선을 통한 동해의 현시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자 중국은 군함현시에도 나서고 있다. 2021년 3월 중국은 2척의 구축함과 1척의 호위함으로 구성된 전투함 전대를 보내 동해에서 현시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50] 여기에는 자신이 중국형 줌왈트라고 선전하는 난창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48) *Yonhapnews*, "Chinese, Russian military aircraft violate S. Korea's air defense zone," December 22, 2020, https://en.yna.co.kr/view/AEN20201222009051325 (검색일: 2021년 4월 26일).

49) *NBC News*, "The deadly secret of China's invisible armada," July 22, 2020, https://www.nbcnews.com/specials/china-illegal-fishing-fleet/ (검색일: 2021년 4월 26일).

50) 『NEWSIS』, "중국 최신예 055형 등 군함 3척 쓰시마해협 통과 동해 진입," 2021년 3월 20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0_0001377234&cID=10101&pID=10100 (검색일: 2021년 4월 26일).

향후 중국은 자국의 어선단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경함정 및 군함을 동해에 상시배치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어로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회색지대 강압의 속성을 이용하기에 한국은 군사적 대응에서 난해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어선단에는 해상민병과 군인이 편승하여 불법조업 어장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찰임무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어선과 군함의 동시 현시작전으로 동해에서 한국의 해양이익은 잠식하게 될 것이고 양면 균형 역학에 따라 그 강도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V. 결론

본 논고는 미·중의 양면 균형 역학이 창출해내는 지정학적 도전과제를 시나리오 차원에서 전개양상을 전망하였다.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지정학적 도전과제든 한반도 차원의 지정학적 도전과제든 모두 한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함의가 적지 않다. 우선 학문적 함의로 지정학 연구의 정교화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신냉전 담론 부상과 함께 지정학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남중국해 등 물리적 지대에 기반을 둔 지정학 외에도 탈경계 혹은 비물리적 지대로의 지정학 영역 확장에 주목하며 복합지정학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51] 본 논고는 이러한 지정학에 대한 관심을 중견국으로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한국은 지형적으로 림랜드(rimland)의 속성을 지닌 한반도라는 특성과 한·미동맹, 한·중협력이라는 국제정치적 환경 나아가 중견국이라는 지위가 맞물려 '중견국 지정학'이라는 3차 지정학 방정식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 제시한 양면 균형 역학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과 제시된 11개 지정학적 과제에서 중견국 한국의 상관성을 추적하는 것은 지정학 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논고는 외교안보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양면 균형 역학

51) 복합지정학에 대한 논의는 김상배,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국가전략』 제26권 제2호 (세종연구소, 2020), pp. 5-34; 김상배,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4호 (한국정치학회, 2020), pp. 53-81 참고.

에 따라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역이용하여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선제적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신냉전 시대의 양면 균형 역학에서 한국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간파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의 안보이익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동맹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안보 사안에 한국이 고강도 협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미 레버리지(leverage)도 높임으로써 상호 간 주고 받는 '이익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맹의 대칭성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동맹국과 멀어지게 만드는 균형외교의 허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균형외교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경사론처럼 비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안보이익을 해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견국의 국익외교'라는 접근법을 지향해야 한다.

동맹관리전략을 통해 '제2의 애치슨라인'이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북핵 등 한반도의 핵심문제에서 한국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미 협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이 부상하면 한국 단독이 아닌 한·미동맹 차원에서 나설 수 있게 대응방향을 명문화·정교화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의 보복에 다자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역내 외교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견국 맞춤형 전략 하에 역내 중견국 간 다자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과 같은 중견국 지정학에 기반한 정책이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내실화를 통해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견국 지정학에 부합하는 신규 외교정책과제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미·중충돌로 기존 질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회색지대 전략에 노출되어 이익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회색지대 정책구상'도 필요하다.[52] 조직적 차원에서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세부정책을 조율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포괄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52) 반길주(2020c)는 주변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노출되지 않도록 "흑백지대전략"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길주,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군사』 제7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c), pp. 59-62 참고.

[참고문헌]

강석율. “미중 지정학 경쟁의 최근 동향과 전망: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20).

강수정.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분석: 2010년대 미국 싱크탱크들의 미래 전망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7권 제2호 (국제지역연구원, 2020).

김상배.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국가전략』 제26권 제2호 (세종연구소, 2020).

_____.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4호 (한국정치학회, 2020).

김재관.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동북아연구』 제33권 제2호 (동북아연구소, 2018).

김현승. “대만해협 위기 시 중국의 해군력 운용 양상 평가 및 안보적 함의 – 대만해협 봉쇄 및 미군 개입 거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총』 제7집 제1권 (미래군사학회, 2018).

김현욱. “현 미중 경쟁 분석과 한국의 선택.” 『정책연구시리즈』 2020-0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박남태·백승조. “중국군 전략지원부대의 사이버전 능력이 한국에 주는 안보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국방연구원, 2021).

박병광. “2021년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망: 혼돈의 지속과 심화되는 각국의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 『이슈브리프』 통권 235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반길주. “미중 패권전쟁의 충분조건 분석: 결정론적 구조주의 한계 보완을 위한 행위적 촉발요인 추적.”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a).

_____. “해양경계 모호성의 딜레마: 동북아 방공식별구역의 군사적 충돌과 해양신뢰구축조치.” 『아세아연구』 제63권 제2호 (아세아문제연구원, 2020b).

_____. “동북아 국가의 한국에 대한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군사』 제7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c).

_____.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a).

_____. “중국의 투트랙 해양군사력 구비전략과 한국의 도전과제.” 『아세아연구』 제64권 제1호 (아세아문제연구원, 2021b).

신성호.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지구를 넘어 우주 패권 경쟁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2호 (국제학연구소, 2020).

안슬기. “중국의 남중구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가능성에 대한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31집 제1호 (21세기정치학회, 2021).

이정남. “시진핑(习近平)의 중국몽(中国梦): 팍스 시니카(Pax-Sinica) 구상과 그 한계.”

『아세아연구』 제61권 제4호 (아세아문제연구원, 2018).

유희복. “주요 모순의 재규정과 중국몽: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전략적 변용.” 『중국지식네크워크』 제14권 제14호 (중국지식네트워크, 2019).

정구연·이재현·백우열·이기태.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23권 2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8).

정성철.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쇠퇴? 글로벌 패권의 약화와 민주주의 중견국의 규칙기반질서 추구.” 『정치·정보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20).

정한범. “동북아: 전통적 강자들의 귀환과 위기시나리오.” 『국제정치연구』 제19집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6).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집 제1호 (국제정치학회, 2018).

Allison, Graham.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2017).

Lin Bonny, Michael S. Chase, Jonah Blank, Cortez A. Cooper III, Derek Grossman, Scott W. Harold, Jennifer D. P. Moroney, Lyle J. Morris, Logan Ma, Paul Orner, et al. “U.S. Versus Chinese Powers of Persuasion: Does the United States or China Have More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Research Brief,* 12 November 2020 (2020).

Scobell Andrew, Edmund J. Burke, Cortez A. Cooper III, Sale Lilly, Chad J. R. Ohlandt, Eric Warner, J.D. Williams. *China's Grand Strategy: Trends, Trajectories, and Long-Term Competition* (Santa Monica, CA: RAND, 2020).

The Economist. “The South China Sea: Reef madness.” April 10, 2021.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 (Geneva: Global Trends, 2021). www.dni.gov/nic/globaltrends

Wagner, Benjamin K. “Lessons from Lassen: Plotting a proper course for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 9, No. 1 (2016).

〈신문〉

『동아일보』. “미군, 우리 영해서도 ‘항행의 자유 작전’ 펼쳤다.” 2021년 4월 7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7/106282706/1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부산일보』. “중국, 자국 수역 내 해경 무기 사용 허용…일본 긴장감 증폭.” 2021년 1월 31일.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3118135469679 (검색일: 2021년 4월 22일).

『서울신문』. “美·EU·英 ‘홍콩 간섭 멈춰야’…中 ‘내정 간섭 말라’.” 2020년 6월 12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2500209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신화망』.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 발표.” 2018년 1월 27일. http://kr.xinhuanet.com/2018-01/27/c_136928858.htm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아시아경제』. “[글로벌포커스] 美·中 함대 추격전, 전운 감도는 대만해협…G2 일촉즉발 대치.” 2021년 4월 13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1311232817896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연합뉴스』. “‘미, 일 겨냥 항행의 자유 작전…직선기선·영해확대 문제삼아’.” 2021년 4월 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5145100073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_____. “[전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년 5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input=1195m (검색일: 2021년 6월 15일).

_____. “중국 대만 공중압박 소강…‘중국 2025년 대만 전면침공 역량’.” 2021년 10월 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6025752089 (검색일: 2021년 12월 11일).

윤석준. “〈윤석준의 차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 『조선일보』. 2021년 4월 5일.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58&num=5960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한겨레』. “중국, 신장 관련 영국에 보복 제재…게임서 버버리도 퇴출.” 2021년 3월 26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8361.html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NEWSIS』. “중국 최신예 055형 등 군함 3척 쓰시마해협 통과 동해 진입.” 2021년 3월 20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0_0001377234&cID=10101&pID=10100 (검색일: 2021년 4월 26일).

NBC News. “The deadly secret of China’s invisible armada.” 2021년 7월 22일. https://www.nbcnews.com/specials/china-illegal-fishing-fleet/ (검색일: 2021년 4월 26일).

Reuters. “Three Russian submarines surface and break Artic ice during drills.” 2021년 3월 27일. https://www.reuters.com/article/us-russia-military-

arctic-idUSKBN2BI2RZ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Skynews. "Suez Canal blocked: What the mishap in one of the busiest shipping lanes means for the world." 2021년 3월 31일. https://news.sky.com/story/why-the-cost-of-suez-canal-mishap-is-being-calculated-around-the-world-12255715 (검색일: 2021년 4월 22일).

South China Morning Post. "How next-generation technology could allow US to fight off mainland Chinese invasion of Taiwan." 2021년 4월 24일.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130848/how-next-generation-technology-could-allow-us-fight-mainland (검색일: 2021년 4월 27일).

Yonhapnews. "Chinese, Russian military aircraft violate S. Korea's air defense zone." 2021년 12월 22일. https://en.yna.co.kr/view/AEN20201222009051325 (검색일: 2021년 4월 26일).

〈인터넷자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 NIC「2040년 글로벌 추세 보고서」발간." 『KIMA Newsletter』. 제978호 (2021). https://www.kima.re.kr/3.html?Table=ins_kima_newsletter&section=&mode=view&uid=1022?Table=ins_kima_newsletter&s=11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Keck, Zachary. "Russia to Eastablish Arctic Military Command." *The Diplomat*, 2021년 2월 21일. https://thediplomat.com/2014/02/russia-to-establish-arctic-military-command/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1년 4월 13일 https://www.dni.gov/index.php/newsroom/reports-publications/reports-publications-2021/item/2204-2021-annual-threat-assessment-of-the-u-s-intelligence-community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The White House. "U.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U.S.-Japan Global Partnership for a New Era'." 2021년 4월 16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16/u-s-japan-joint-leaders-statement-u-s-japan-global-partnership-for-a-new-era/ (검색일: 2021년 4월 22일).

Tulupove, Dmitry. "Russian Services Have a Price." *RIAC*. 2021년 3월 21일. https://russiancouncil.ru/en/analytics-and-comments/analytics/russian-services-have-a-price/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U.S. Navy. *A Blue Arctic: A Strategic Blueprint for the Arctic*. 2021년 1월 5일. https://media.defense.gov/2021/Jan/05/2002560338/-1/-1/0/ARCTIC%20BLUEPRINT%202021%20FINAL.PDF/ARCTIC%20BLUEPRINT%202021%20FINAL.PDF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Valencia, Mark J. "The Whitsun Reef Incident and the Law of the Sea." *Lawfare*. 2021년 4월 16일. https://www.lawfareblog.com/whitsun-reef-incident-and-law-sea (검색일: 2021년 4월 20일).

[ABSTRACT]

Tracing Scenarios under the U.S.-China Structural Competition: Two-Level Balancing and Policy Implications

Kil Joo Ban | Director of the Center for Security Studies, Inha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While defining 2049 as the very first year of achieving the Chinese Dream, Beijing is stepping up its effort for a successful power transition. Thus, from a viewpoint of the U.S.-China conflict, a raft of scenarios are feasible from the present to the year of 2049. Meanwhile, the outlook of 'power redistribution' in an international system is likely to determine the scope and level of these scenarios. Power redistribution is composed of two dynamics: internal balancing and external balancing. The former lays out four possible directions and the latter leads to three situations.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dynamics is conceptualized here as 'two-level balancing.' Under the concept of two-level balancing, this paper introduces 11 possible scenarios regarding geopolitical challenges: seven items in international geopolitics and four items in the Korean Peninsula geopolitics. Academically, this examination allows middle power geopolitics to be paid additional attention in the study of geopolitics. This study also sheds some light on which policies Seoul should develop by recommending an alliance management strategy, a middle-power-oriented policy, and an anti-gray zone strategy.

Key Words: Scenarios of the U.S.-China conflict, Internal balancing, External balancing, Balance of power, Bandwagoning

투 고 일: 2021. 11. 30
심 사 일: 2021. 12. 07
게재확정일: 2021. 12. 13